

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(주요정책부문)

2017. 1

금 융 위 원 회

금융위원회

I. 평가개요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○ 평가대상 : 총 26개 과제

○ 평가지표 (요약)

평가 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	비 고	배 점
계획 수립의 적절성	계획수립시 사전조사, 의견 수렴의 충실성	○ 관련통계현황.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(정책수요자),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	대부분의 과제가 제도개선 과제로 의견수렴이 중요	20
시행 과정의 적절성	추진일정의 충실성	○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	평가수행 객관성과 평가결과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	20
성과 달성도	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	○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	목표달성도에 따라 4등급 구분 및 연속지표 적용	30
	성과지표의 적절성	○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	목표치의 하향 평준화 방지를 위한 지표	10
정책 효과성	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	○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○ 해당과제가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한 정도	정책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정책효과성 측정 필요성	20

○ 평가지표 (상세)

< 계획수립의 적절성 >

평가지표	1. 계획수립시 사전조사, 의견수렴의 충실성							
측정방법	○ 관련통계현황.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.전문가 의견수렴 여부							
	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							
	②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·전문가 의견수렴 실시							
	<table><tr><th>점수</th><th>판단근거</th></tr><tr><td>18점이하~13점 초과 (우수)</td><td>①,②를 모두 충족하며, 사전조사·의견수렴 절차가 질적으로도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</td></tr><tr><td>13점이하~5점 초과 (보통)</td><td>①,②를 모두 충족하나,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td></tr><tr><td>5점이하(미흡)</td><td>①,②중 하나라도 미충족</td></tr></table>	점수	판단근거	18점이하~13점 초과 (우수)	①,②를 모두 충족하며, 사전조사·의견수렴 절차가 질적으로도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	13점이하~5점 초과 (보통)	①,②를 모두 충족하나,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5점이하(미흡)
점수	판단근거							
18점이하~13점 초과 (우수)	①,②를 모두 충족하며, 사전조사·의견수렴 절차가 질적으로도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							
13점이하~5점 초과 (보통)	①,②를 모두 충족하나,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						
5점이하(미흡)	①,②중 하나라도 미충족							
	※ 단, 1회 실시만으로 만점(15점)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부여(19, 20점) ※ 단, 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 점수부여							
측정기준	○ ‘충족’ 판단 기준							
	①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							
	-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,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							
	-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, 근거 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							
	② 이해관계자.전문가 의견수렴							
	- 공청회, 토론회, 간담회, 협의회,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							
	- 개최 계획(공문, 업무연락, 금융위 홈페이지 게시물 포함)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							
	*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(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)							
	* 다만,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,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·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							
평가근거 /자료	○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등 ○ 공청회, 간담회, 협의회, 설문조사,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등							

< 시행과정의 적절성 >

평가지표	2. 추진일정의 충실성										
측정방법	<p>○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</p> <div>○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</div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점수</th><th>판단근거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점(5점)</td><td>3조항 이상의 법률 개정 및 법률 제정 → 5점 단순한 법률 개정(3개조항 미만) → 3점 시행령, 규정개정 → 2점 관련기관 내부 기준·지침 개정 → 1점</td></tr> <tr> <td>15점(우수)</td><td>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</td></tr> <tr> <td>10점(보통)</td><td>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이상인 경우</td></tr> <tr> <td>5점(미흡)</td><td>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미만인 경우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점수	판단근거	가점(5점)	3조항 이상의 법률 개정 및 법률 제정 → 5점 단순한 법률 개정(3개조항 미만) → 3점 시행령, 규정개정 → 2점 관련기관 내부 기준·지침 개정 → 1점	15점(우수)	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	10점(보통)	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이상인 경우	5점(미흡)	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미만인 경우
점수	판단근거										
가점(5점)	3조항 이상의 법률 개정 및 법률 제정 → 5점 단순한 법률 개정(3개조항 미만) → 3점 시행령, 규정개정 → 2점 관련기관 내부 기준·지침 개정 → 1점										
15점(우수)	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										
10점(보통)	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이상인 경우										
5점(미흡)	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% 미만인 경우										
측정기준	<p>○ '충족' 판단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*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*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된 경우,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<div> <p>○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적 환경(대북관계 포함)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-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-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</div>										
평가근거 / 자료	○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										

< 성과달성도 >

평가지표	3-1.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										
측정방법	<div>○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</div> <div>< 4단계 배점 방법 ></div> <table><tr><th>평가등급</th><th>S(매우 우수)</th><th>A(우수)</th><th>B(보통)</th><th>C(미흡)</th></tr><tr><td>점수</td><td>30점이하 ~24점 이상</td><td>23점이하 ~18점 이상</td><td>17점이하 ~12점 이상</td><td>11점이하</td></tr></table>	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점수	30점이하 ~24점 이상	23점이하 ~18점 이상	17점이하 ~12점 이상	11점이하
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						
점수	30점이하 ~24점 이상	23점이하 ~18점 이상	17점이하 ~12점 이상	11점이하							
측정기준	<div><div>□ ‘S’ 판단 기준</div><div>○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하였으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홍보활동, 하위규정 개정 준비, 정책 집행과정 모니터링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</div><div>□ ‘A’ 판단 기준</div><div>○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%이상 달성하였으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홍보활동, 하위규정 개정 준비, 정책 집행과정 모니터링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</div><div>□ ‘B’ 판단 기준</div><div>○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% 이상 ~ 100%미만 달성</div><div>□ ‘C’ 판단 기준</div><div>○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%미만 달성한 경우</div><div>※ 다만,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들의 평균 달성율을 기준으로 판단</div><div>※ 성과지표가 비계량 지표인 경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면 해당관리과제의 달성율은 100%-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면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실적을 기준으로 달성율을 판단</div><div>* 목표미달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</div></div>										
평가근거 / 자료	<div>○ 성과관리시행계획 등</div>										

평가지표	3-2. 성과지표의 적절성												
측정방법	<div>○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</div> <div><table><tr><td>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(5점)</td></tr><tr><td>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(5점)</td></tr></table></div> <div>○ 위의 ①, ②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</div> <table><tr><th>평가등급</th><th>S(매우 우수)</th><th>A(우수)</th><th>B(보통)</th><th>C(미흡)</th></tr><tr><td>점 수</td><td>10점이하 ~8점이상</td><td>7점이하 ~6점이상</td><td>5점이하 ~4점이상</td><td>3점이하</td></tr></table>	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(5점)	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(5점)	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점 수	10점이하 ~8점이상	7점이하 ~6점이상	5점이하 ~4점이상	3점이하
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(5점)													
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(5점)													
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								
점 수	10점이하 ~8점이상	7점이하 ~6점이상	5점이하 ~4점이상	3점이하									
측정기준	<div>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(5점)</div> <div>-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, 신규사업인 경우,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·정성적으로 판단</div> <div>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(5점)</div> <div>-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</div> <div>-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(성과정보의 신뢰성)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</div> <div>* 성과정보의 신뢰성 :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,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</div>												
평가근거/ 자료	○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,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												

< 정책 효과성 >

평가지표	4. 정책영향(효과)이 발생한 정도																	
측정방법	<p>○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 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한 정도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</td> </tr> <tr> <td>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 정도</td> </tr> </table> <p>○ 과제평가등급을 소위원회별.평가위원별로 4단계 강제배분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평가등급</th> <th>S(매우 우수)</th> <th>A(우수)</th> <th>B(보통)</th> <th>C(미흡)</th> </tr> <tr> <td>배분 비율</td> <td>20%</td> <td>25%</td> <td>40%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20~16점</td> <td>15~11점</td> <td>10~6점</td> <td>5점</td> </tr> </table>	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	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 정도	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배분 비율	20%	25%	40%	15%	점수	20~16점	15~11점	10~6점	5점
①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																		
②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 정도																		
평가등급	S(매우 우수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													
배분 비율	20%	25%	40%	15%														
점수	20~16점	15~11점	10~6점	5점														
측정기준	<p>○ ‘충족’ 판단 기준</p> <p>① 정책영향(효과)이 구체적으로 발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-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“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”, “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”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가능 <p>②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 정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																	
평가근거/자료	○ 정책영향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 근거 등																	

II. 평가결과

(1) 총 평

□ '16년도 총 20개 과(팀)의 2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○ 매우우수 1개(4%), 우수 3개(12%), 다소 우수 6개(22%), 보통 8개(30%), 다소 미흡 4개(16%), 미흡 3개(12%), , 부진 1개(4%)로 나타남

- 우수 이상 과제는 'I-1-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', 'I-2-① 우리 은행 민영화', 'III-2-②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' 등 4개 과제이며

- 미흡 이하 과제는 'I-4-③ 신성장산업 지원', 'I-4-⑤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', 'III-1-①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강화' 등으로 평가

□ 총 26개 관리과제의 4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4%로

○ 4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(단, 1개 과제의 경우 1월 초 달성)

○ 성과 목표치 미달성 지표는 주로 법령 개정 사안으로, 규제위 또는 법제처 심사지연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

* 예) IV-2-② 회계제도 인프라 개선의 성과지표인

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제출’

: 규제위 1차심사시 철회권고된 내용(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근거 마련)을 보완, 재심사를 거쳐 통과시킴에 따라 규제위 심사가 지연되었고 전부개정안으로 분량이 방대하여 법제처 심사과정도 일부지연(6개월 소요)

⇒ 단 ‘16년 국무회의·국회제출 등 행정적 절차만 일부 남기고 미달성되었으며 ‘17년 1월 남은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제출 완료

(2) 주요성과

□ 'I-1-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', 'I-2-① 우리은행 민영화', 'II-1-①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', 'III-2-②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' 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,

○ (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) 연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* 시행(2월)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** (8월) 및 그 후속조치 시행(11월)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

* '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',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' 2가지 원칙에 기초한 선진국형 여신심사·사후관리 제도

** ①가계소득 증대, ②주택시장 관리, ③부채관리 및 ④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망라한 관계기관 합동 종합 관리방안

○ (우리은행 민영화) 7개 과점주주 낙찰자와 우리은행 지분 29.7%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6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민영화의 결실을 맺음

- 약 2.4조원의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, 과점주주라는 새로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여 혁신을 유도

○ (금융소비자 편익증진) 국민의 재산관리 효율성 및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비활동성 계좌를 자발적·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「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」 도입

○ (중금리신용대출 활성화) 서울보증보험을 연계*한 「사잇돌 대출」을 은행(7월, 13개사) 및 저축은행(9월, 30개사)에서 출시하고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

- 주요 인프라 개선 내용으로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,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, 은행-저축은행 연계영업 활성화, 서민금융 평가에 중금리 대출실적 반영 등이 있음

(3) 개선·보완 사항

- 'I-4-③ 신성장산업 지원', 'I-4-⑤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',
'III-1-①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강화' 'III-1-② 신용정보보호
체계 개편'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,
 - (신성장산업 지원) ICT, 바이오·헬스, SW, 공연 등의 분야에 정책
자금 80조원을 공급하는 등 성과지표를 달성했으나
 -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고
금액 기준 목표로 정책이 평가되기보다 정책 효과에 대해 보다
구체적인 분석결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평가
 - (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) 선도금융산업 육성, 자본시장 역동성
제고 등 「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('14~'16)」을 적극 시행했으나
 - *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('16.8), 자산
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('16.5) 마련 등
 -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의 유효성을 재점검
해야 하고, 정책의 산출(output) 및 결과(outcome)를 효과적으로
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·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
 - (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강화)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·설명제도,
금융회사 내부 판매인센티브 개선 도입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
발굴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추진했으나
 -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금융
소비자보호 체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평가
 - (신용정보보호체계 개편)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의 범위,
비식별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
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
 - 타부처의 협조 및 입법을 수반해야 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정책의
실효성 있는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

(4) 평가결과 종합

관리과제명	자체평가결과
I -1.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.	
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	매우우수
② 내집연금 3중세트	다소우수
I -2.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, 기업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.	
① 우리은행 민영화	우수
② 예금보험제도 개선	다소우수
③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	보통
I -3.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한다.	
①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	보통
② 외환 건전성 규제 개선	보통
I -4.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.	
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	다소미흡
② 검사·제재 개혁	다소미흡
③ 신성장산업 지원	부진
④ 해외 금융시장 개척 기반 마련	다소미흡
⑤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	미흡
II-1. 신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.	
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	우수
② 보험다모아 기능 고도화	보통
II-2.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.	
① 핀테크산업 육성	보통
② 온라인·모바일 금융거래 활성화	보통
II-3.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.	
① 전자금융사기 예방	보통
III-1.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.	
①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립	미흡
② 신용정보보호 체계 개편	미흡
III-2.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.	
①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	우수
②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	다소우수
III-3. 현장을 통해 금융감독을 개선한다.	
① 현장점검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	다소우수
IV-1.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.	
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	다소우수
② 창조경제 투자 활성화	다소우수
IV-2. 자본시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한다.	
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	다소미흡
② 회계제도 인프라 개선	보통